

# “아이 낳기 좋은 전북”

### 민주 김윤덕 의원, ‘송천 맘’ 들과 간담회 맞벌이 부부 안심보육센터 설치 확대 약속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은 16일 전주시 송천동에서 ‘송천 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전주시 관광활성화’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송천동 맘들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6일 전주시 송천동에서 ‘송천 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인 한옥마을이 점점 힘을 잃어 가고 있다’며 “관광활성화와 전주시민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직도 육아 환경이 열악한 상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의원은 “아직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은 여자의 몫으로만 생각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전북 맞벌이 부부 안심 보육센터 설치 확대, 시군 연계 어린이집 친환경 보육 공간 리모델링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 자동차 교체 및 안전 시설 보강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한옥마을과 연계해 이종호수 인근 관광거점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포털을 개발하고, 전주동물원과 유기적 관광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한옥마을로 국한된 관광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방치돼 있는 기무대 부지를 활용, 문화복합 공영 조성을 통해 지역 어린이, 보호자 등의 문화 향유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대한방직 터, 디지털 디즈니랜드 중심으로”

###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민간사업자 역할 중요”



전주시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디지털 디즈니랜드’ 중심으로 속도를 내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6일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오랜 현안 중 하나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피력하며 이곳에 디지털 디즈니랜드를 조성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필요성에 대한 여론에 적극 공감하는 동시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XR(Extended Reality·확장 현실),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를 비롯해 전 세계 게임 모두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전주에는 한옥마을 뛰어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디지털 디즈니랜드가 그 해법이다”며 “한옥마을 방문객 몇 배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자신한다. 완전히 새로운 전주로 도약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옛 대한방직 부지를 소유하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시민공공화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과 당초 계획했던 익스트립 타워를 우선 완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레어만 전주시민도 개발 추진 의지를 신뢰할 것이라며 익스트립 타워의 우선 완공 조치가 공식적으로 담보된다면 현재 사업자가 전주시에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익스트립 타워는 디지털 디즈니랜드의 큰 축으로 이를 통해 전주 랜드마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옛 대한방직 부지처럼 큰 이익이 발생하는 개발위는 정책협업자인 시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공격 소멸의식에 따라 오로지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겠다”며 “개발 이익에만 관심을 둔다면 전주는 큰 불행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들어설 디지털 디즈니랜드는 완전히 새로운 전주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주를 사람이 몰려드는 핫한 도시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전담조직 필요”

### 강용구 도의원 “장기 시설공사로 안전성 우려, 자원 부담도”

총 사업비 677억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도의원(교육위원회·남원2)은 16일 전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 교육청에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에서는 이미 추진조직을 별도로 구성했고, 5개 교육청은 시설과에 전담팀을 구성해 맡게는 10명까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반면,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은 시설과 내에 담당자 1명 정도를 두거나 시무부장을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5년에서 7년까지 소요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용구 의원은 “서울 등 몇몇 지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장기간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재원 부담 발생



지역 교육정책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이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현재의 사업 추진 IT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담 조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강용구 의원은 교육감을 상대로 무상교육 정책 개선과, 회계사과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직인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는 2020년 삼진강댐·용담댐 수해보상 관련 전북도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호상 기자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시작했지만, 지방수발에 대응하는

###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앞장”

전주시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회관 건립과 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공약했다.

유 부의장은 지난 15일 전주시에 인단체총연합회 10개 대표들과 만나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전주시 장애인 회관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소통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과 현실적인 인건비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부의장은 장애인들의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들의 소통 공간 확보 차원에서 장애인회관 건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축을 위한 인력을 충원,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취업한 장애인들이 현실적인 대접을 받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 현재 기초수급 정도에 그치고 있는 지원금을 스스로 자립을 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의회 5분 발언

### “전주항공대대 이전 문제, 시장 임기 내에 해결해야”

#### 송영진 전주시의원 “도도동 이전 3년 째, 갈등·혼란은 여전”

이전 3년이 지나도록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전주 항공대대 문제를 현 시장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전주시의회 송영진(혁신, 덕진, 팔복, 조촌, 여의동) 의원은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항공대대 이전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장임기 내 현안 과제)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항공대대가 40여 년간 보금자리였던 송천동을 떠나 도도동에 새 동지를 틀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과 혼란이 휩싸여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



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대 이전에 따라 보상책으로 약속했던 공공청사 이전과 정원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무른 주

인이 추진 상황을 체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월기 장주로는 전주시와 김제시 백구면, 완주군 이서면 구간을 운항키로 했으나, 완주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자 비대위와 협의 없이 장주로 축소를 결정해 더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옛 항공대대 부지를 포함한 송천동 일부 지역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그는 “기존 송천동 대대 부지 중 85%는 국방부가 양여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부지는 소용민원이 해결된 후 넘겨주겠다는 입장

으로 송천동 개발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대대는 이미 이전해 들어갈 수 없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대대 이전 문제는 임기 종료 전에 해결해야 할 현안임을 인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상생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일손부족·농자재값 상승 3중고 농민들을 위해 추가대책 마련을”

### 황의탁 도의원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이 16일 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번거로워지면서 발생한 일손부족과, 국제유가를 비롯한 비료, 농약 등 급격한 농자재 값 상승 산지 농산물가격은 하락이라는 3중고에 도내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추가적 대책마련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개선,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부활”을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81명이었지만 실제 도입된 인원은 125명으로 배정인원의 18.4%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1,308명이 도내에 배정되었지만 실제 농촌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황의탁 의원은 “또, 현재의 농부권



발전사업 추진방식은 변화를 줘야 한다”며 “매년 시·군별로 60여 원에 이르는 비슷한 사업비를 지원 하는 것보다, 시·군별 격차로 120여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 그는 교육감을 상대로 탄소중립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5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교육감을 상대로 탄소중립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전담조직 구성과 환경교육 전담자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임정엽 전 완주군수 “전주형 택시호출앱 도입”

전주시출마예정자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택시호출앱 시장의 대기업 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주형 택시호출 공공앱(App) 서비스’ 도입을 공약했다.

임 전 군수는 16일 정책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몰 몰아주기 등으로 운영난에 처한 전주지역 택시업계를 돕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택시호출 공공앱 서비스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택시호출 공공앱 서비스는 이용객이 앱을 설치해 호출하면 같은 앱을 설치한 택시 기사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호출비와 중개 수수료 모두 무료다.

임 전 군수는 지역 택시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용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 “출산을 제고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서둘러야”

#### 김윤철 전주시의원 “사설에 비해 비용 저렴”

전주시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산모의 산후조리 장소로 조리원이 선호되고 있고, 사설에 비해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의회 김윤철(풍남, 노송 인후 3동)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의 10여 개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이 사설 대비 68% 수준으로 저렴하고, 최근에는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음압병실도 갖춰 돌봄에 안전 기능까지



더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있다. 경기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약을 위해 전날부터 센터를 치거나 타 박으로 날을 새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는 온라인 예약이 개시 1~2분이면 마감될 정도로 일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 원정출산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반면 전주는 산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떠나 이런 예약 경쟁에 차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

으로 13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전주에는 9개의 사설 조리원만 운영되고 있고, 전북의 경우에도 공공시설을 찾아볼 수 없어서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선호도는 78.1%로 압도적이지만, 평균 소모 비용은 243만,000원을 넘어 몇 천 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한 명 낳는 데 이미 수 백 만원의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출산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공동체 파괴와 지역소멸 문제로 이어지고, 그 출발은 출산 정책으로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더 이상 미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